

전주매일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완경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음 11월 17일) 제17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누리예산 추경 편성 '평행선'

도의회 “보육대란 막자” 도교육청 “끝까지 거부”

미집행시 내년으로 이월 교육부 예산 삭감 조치도

〈속보〉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을 두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 (본보 12월 14일자 1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의결 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보육대란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원칙과 명분'을 앞세우며 정부책임이라고 예산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예결위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의결 중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었고, 도의회는 보육대란을 막기위한 조치라며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의결하는 조강수를 뒀다.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기 위해 도의회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육상방수 사업 등 총 996건 757억 4,200만원과 예비비 4억5,800만원 등

총 762억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같은 추경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은 예산안을 의회가 의결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행하지 않게 되면 이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또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밝힌 예산 삭감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 교육청에게 내년 교부금 감액과 지방채 불상인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지원 중단 등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금까지(우리를) 압박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법안이 시행령을 통해서만 압박했지 실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회나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회계법 만들어졌으니 올해 예산도 편성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에서 강제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762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교육

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 제재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모두 1,4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손실분은 1,400억원 가운데 목적 예비비 145억원과 전북도청이 어린이집에 긴급 지원한 운영비 188억원 등 최대 333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 교육청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기를 날 전망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도의회의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해주면 3일안에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고, 20일 안에 교육청에서 다시 신청을 해달라고 재요구가 들어온다”라며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의결을 하게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에서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조치이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재 김명재의원 원장(왼쪽),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가운데),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오른쪽)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령이 주사났나?’ ... 박 ‘피명자국’ 도마위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포착된 박근혜 대통령의 '피명' 자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언론이 이날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인 2014년 5월 13일, 입가에 피명 자국이 선명한 박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이에 박 대통령의 입가 피명이 필러 주사에 의한 후유증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규명과 함께, 박 대통령의 '피명' 자국에 질의를 집중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료진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국정특위 3차 청문회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규명 중 '피명' 자국 질의 증인 출석한 의료진들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 야당 의원들은 일제 반발

신인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월호 7시간”의 핵심인물 자목됐던 신보라 전 간호장교 또한 “(피명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저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까지 “(피명이 있는지 당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며 “화면의 그림을 보니 믿음이 있고 지금 느끼는 것이지, 전혀 제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창석 전 주치의가 제3의 의료진이 또 있는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野 “유령이 났냐”, “금기어냐”... 반발 증인들의 모르쇠 진술에 야당 의원

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출석한 증인이 아닌 제3자가 시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는 두 가지 금기어가 있다”며 “하나는 세월호고, 또 하나는 대통령 얼굴의 명자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 안면사진을 정밀비교한 결과, 신년 기자회견 사진에는 6곳의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5월13일 사진에는 피명 자국이 있다”며 “대통령 얼굴에 관해서는 김영재 원장 외에는 전문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사바늘을 놓은 사람이 없다”고 목격사를 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 또한 “이 중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김영재 원장 뿐”이라며 김 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증인석을 향해 “이 중에서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재 원장과 정기아 전 대통령 자문의가 손을 들었다.

안 의원은 증인들이 모두 피명 자국의 존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자, “아니, 대통령의 얼굴을 시술했는데 이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걸 유령이 한 것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자 “의사가 아닌 간호장교가 시술을 했다는 가설이 터무니 없느냐. 주사를 잘 놓는다는 조모 대위가 시술을 배워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 대위가 '야메'로 관저에서 (필러) 시술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3차 청문회 질의가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일부가 청문회장을 찾기도 했다. /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하라”

전북학연협, “강행시 교과서 구입 예산 승인 안할 것”

전북학연협은 14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관계자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더 이상 역사교과서 관련 국문분열과 역사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잘못된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꺾

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있다”며 “교육부가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것은 역사왜곡과 독재미화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드러난 국정교과서 현장본은 대한민국 건국일 문제, 개발 독재 미화, 독재 정치 분야 축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획일화”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할 위험이 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교육

의 다양성이 말라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또 친일을 미화하거나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건국일 논란 자체가 일제 식민지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친일행위의 반민족성을 축소하고 심지어, 박정희 개발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각종 비이성적인 발언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을 고려하면 국정교과서 또한 최순실의 지사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계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될 경우 각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협의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개발을”

도의회 박재만 의원, 5분발언서

“새만금 사업 등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도내 어업 생산량이 사업 전보다 73.5% 급감”

새만금 사업 등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도내 어업 생산량이 새만금 간척지 사업전보다 73.5%나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및 새만금 간척에 따른 전북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개발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기후변화와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업생산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며 “어업량 감소에 따른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수산자원 조사를 전북도 연안 해역 전체로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새만금 방조제 공사전 평균 수온은 14.49°C였으나 2011년 준공 후 평균 수온은 15.57°C로 1.08°C 상승했다.

기온변화와 새만금 간척사업은 도내 어업생산량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전북 수산물 연도별·유형별 생산동향(22개어종)에 따르면 방조제 공사전 평균 생산량은 8만4,241톤이었으나 방조제 준공 후 평균 생산량은 2만1,905톤으로 공사전보다 무려 73.5%나 급감했다.

새만금 내부 개발로 인해 내수면 어업 생산량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연안 어업도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된 이후 어획량이 확연히 줄었다.

전북 연안어장의 경우 개량조개(99%), 동족(96.2%), 갈치(92.7%), 양태류(87.8%), 강달리(86.4%) 살오징어(85.7%), 병어(85.1%) 품종은 생산 감소세가 매우 뚜렷했다.

반면 바다 수온상승에 따라 난류성 어류인 고등어(서식수온: 10~25°C)가 새로운 어장으로 형성되고 꽃새우는 방조제 공사전에는 생산되지 않았으나, 방조제 공사 진행 시기에 호황을 보이다가 준공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업량 감소에 따른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수산자원 조사가 전북 연안 해역 전체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재만 의원은 “대체어장 개발은 정부의 김 수출산업 확대 전략에 따라 김 양식 어장 확대개발이 필요하다”며 “꽃새우 등 대량 출현과 멸치 어획량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의 특성 및 서식생태 조사를 통한 어장 및 어구어법 개발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원광대학교 1학과 1기입 창업 지원

201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6. 12. 31(토) ~ 2017. 1. 4(수) ☎063-850-5262~4(입학관리과)